【발표논문】

金玉均의 일본 亡命에 대한 日本社會의 인식과 대응

한 성 민(대전대학교 강의전담교수)

1. 서론

甲申政變(1884)에 실패한 金玉均 등의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近代 日本社會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적 망명자였다. 이후 '김옥균 인도 문제'는 朝鮮·日本·淸國 정부의 중요한 외교 쟁점이 되었고, 그의 활동은 항상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閣議에서 결정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망명 이후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망명 이후 김옥균과 관련한 연구는 망명 직후 김옥균의 인도 문제를 둘러싼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교섭과 분쟁, 1894년 김옥균 암살사건의 배후 규명 등 주로 國際政治史 또는 外交史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동안 최초의 근대적 정치 망명자를 수용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 김옥균과 교류하던 인물들과의 에피소드(episode)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치 망명자들을 근대 일본사회에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김옥균의 일본 망명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亡命하여 1884년 12월 13일 長崎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 사실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갑신정변의 사후 조치로 조선 및 청

국과 교섭이 예정되어 있던 일본정부는 개화파의 망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1]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언론은 15일 처음으로 갑신정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으나, 상당 기간 김옥균 등의 망명 사실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일본의 관련은 보도하지 않았다.[2]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일본사회의 반조선·반청국 감정을 자극하였고, 개화파를 '日本黨'이라 칭하는 등 김옥균 및 개화파에 큰 동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 달리 망명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었다. 망명 직후 김옥균 등은 福澤諭吉 등 일본 내 知人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으나, 기대했던 일본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1885년 5월 朴泳孝·徐載弼·徐光範은 福澤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고,[3] 김옥균은 일본에 남아 갑신정변 당시 일본정부의 개입을 폭로하는 동시에 갑신정변의 과정을 회고하여 □甲申日錄□을 저술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갑신정변에 대한 책임문제는 '한성조약'의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김옥균 등 망명자 인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망명자들은 國事犯이기 때문에 萬國公法의 규정에 의해 인도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4]

3. 망명 직후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조선정부는 김옥균 인도 요구가 일본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자객을 파견하였다. 당시 張漵奎(張甲福), 池運永 등 자객들의 암살시도는 김옥균 등의 책략에 의해 실패했다. 이 직후인 1886년 6월 1일 김옥균은 井上馨 외무대신에게 서한을 보내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국외 퇴거 명령으로 회답하였다.

예상치 못한 국외 퇴거 명령에 김옥균은 일단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橫濱로 숙소를 옮기고, 주일외교단을 통해 자신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은 東京에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列國會議를 개최하고 있었다.[5] 김옥균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7일 井上馨은 조선 주재 高平小五郎 임시 대리공사에게 아래의 훈령을 하달하였다.

---

[1] □日本外交文書□ 卷17, 351쪽.

[2] □時事新報□ 1884年 12月 18日 ; □朝野新聞□ 1884年 12月 23日, 社說

[3] □時事新報□ 1885年 5月 28日.

[4] □日本外交文書□ 卷18, 122~125쪽.

[5] 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는 1886년 5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총28회까지 개최되었다(日本國際政治學會 편, 1957 □日本外交史硏究□ 明治時代, 有信堂, 208쪽).

김(옥균)은 증거에 따른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일본정부의 보호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로 결과는 심각해질 것이다. … 정부는 준비되는 대로 김(옥균)을 우리 領土의 밖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옥균)은 여전히 몇몇 外國人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제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에서 池運永의 不在이다. 조선정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提案으로 조선정부가 지운영에게 즉시 일본을 떠나라고 電報하도록 충고하라.[6]

이처럼 일본정부는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의 중에 '김옥균 암살 미수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지운영을 조선으로 귀국시키려 했다.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한 조선정부의 귀국 명령을 그가 귀국을 거부하자, 일본정부는 23일 지운영을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였다.[7] 한편 김옥균에게는 11일자로 내무대신 山縣有朋로부터 정식 국외퇴거 명령이 내려졌다.[8]

그러나 일본은 결코 김옥균의 국외 추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무대신 井上馨는 6월 2일 김옥균의 '국외 퇴거'를 명령하면서 그와 동시에 "李鴻章 등의 요청대로 김옥균을 체포하여 청국이나 조선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명하였다.[9] 그렇다고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도쿄에 그대로 존치할 수도 없었다. 그럴 경우 조선의 암살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태도는 栗野가 조선정부의 요구에 회답한 아래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치범의 인도 문제는 國際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 인도되지 않는데, 하물며 정치범의 인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김옥균을 인도할 경우 일본정부는 歐美 各國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10]

불평등조약 철폐를 외교 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열강으로부터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암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나 국내 치안과 관련하여 열강에게 구실 잡히는 것을 기피하였다.

---

[6] □日本外交文書□ 卷19, 556쪽.

[7] □日本外交文書□ 卷19, 567~569쪽.

[8] □日本外交文書□ 卷19, 574~575쪽.

[9] 요시노부 세가와, 1981「日本近代史에서 본 亡命者問題」, □韓日關係硏究所紀要□ 10·11, 영남대 한일관계연구소, 169쪽.

[10]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마이크로필름 NO. 03059, MT1124「栗野愼一郎復命書」, 00430~00431.

국외퇴거 명령은 김옥균의 小笠原島 유배를 위한 구실이었다. 그를 도쿄에 존치시킬 수도, 국외 추방시킬 수도 없었던 일본정부가 이 시기 김옥균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한 것은 유배였다. 하지만 명목상 망명자이며,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김옥균을 유배 보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외퇴거령에 대한 위반을 구실삼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7월 김옥균에 대한 국외퇴거 방침을 오가사와라도 유배로 변경하였다.[11] 그리고 山縣有朋는 경시총감과 오가사와라도 출장소장에게 김옥균의 처우를 세세히 규정한 훈령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옥균의 유배 생활은 월별로 정리되어 내무성 및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오가사와라도에서 김옥균의 생활은 정기선 때마다 취재되어 일본의 신문을 통해 일본 사회에 알려지고 있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주로 禪書를 읽거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냈다.[12] 오가사와라도의 무덥고 습한 기후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김옥균은 야마가타에게 계속적으로 병고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

그러나 1888년 들어 다시 김옥균과 일본 국내 반정부 세력과의 결탁이 우려되고, 암살 기도 움직임이 있자, 신임 외무대신 大隈重信는 김옥균을 도시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해 8월 김옥균을 北海道의 札幌로 이배하였다.[14]

4. 일본의 대청정책 변화와 김옥균의 도쿄 귀환

김옥균은 1890년에 도쿄로 돌아왔다. 내무대신 西鄕從道의 제안에 의해 각의를 거쳐 11월 21일 유배가 해제되었다. 西鄕가 제시한 유배 해제의 이유는 김옥균과 야당과의 결탁, 조선의 자객 파견 등 그동안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김옥균의 신병 치료였다.[15] 하지만 내지 이주 허가의 실제 이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옥균의 도쿄 이주 요구는 이미 小笠原島 유배 시절부터 계속되었으나, 그때마다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다만 北海道로 이배되었을 뿐이었다. 또 조선의 자객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조

---

[11] □日本外交文書□ 卷19, 582~583쪽.

[12] 김옥균은 교류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小笠原島의 아이들을 친구삼아 지냈는데, 훗날 上海까지 수행하였던 和田延次郎는 그 소년 중의 한 사람이었다(閔泰瑗, 1947 □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82쪽). 그 외에는 유혁노가 3개월에 한번 있는 정기선 때마다 와서 조선과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고, 주문받은 휘호를 받아간 것과 1887년 本因坊 秀榮가 위로차 찾아와서 약 3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다는 것 정도이다.

[13] □日本外交文書□ 卷19, 584~586쪽.

[14] □日本外交文書□ 卷22, 427~428쪽.

[15] □日本外交文書□ 卷23, 335쪽.

선 주재 임시대리공사 近藤眞鋤는 1889년 김옥균의 1차 도쿄 거주 때부터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다.[16] 그리고 김옥균과 民黨의 결탁에 관한 우려도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김옥균의 내지 이주 이래 그가 청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제1의회에서 제5의회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당시 일본정부와 민당은 '해군력 확장'과 '民力休養', '조약개정' 등의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김옥균과 관련한 정치 및 외교 상의 우려는 여전한 것이었음에도 일본정부는 돌연 내지 이주를 허가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각 신문들은 김옥균의 내지 이주 허가를 '자유 해방'이라고 보도했으나, 김옥균에 대한 일본정부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비밀 문건으로 보고되었다.[17]

이것은 일본정부가 김옥균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890년대에 들어서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청국 또는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암살 시도가 있으면, 이를 청국과의 분쟁거리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대립 중인 민당 세력이 김옥균을 이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이를 빌미로 '大井憲太郎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민당 세력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金玉均 暗殺事件과 일본의 對淸 개전여론의 조성

내지이주와 자유활동이 허가되어 김옥균이 도쿄로 돌아오자, 조선정부의 김옥균 암살시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金玉均 암살의 기획자인 李逸稙이 일본에 온 것은 1892년 4월 9일이었다.[18] 그는 權東壽·權在壽·金泰元·川久保常吉 및 上海에서 김옥균 암살의 실행자인 洪鍾宇 등을 동조자로 규합하여 망명자들에게 접근하였다. 和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옥균은 이일직·홍종우 등이 자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옥균은 이들을 통해 李鴻章과의 담판을 위한 청국행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했다. 이일직 등은 김옥균의 渡淸계획에 맞춰 암살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옥균의 청국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朴泳孝·頭山滿를 비롯한 知人들로부터 크게 만류 받았고, 김옥균 자신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래 동지로 믿고 있었던

---

[16] □日本外交文書□ 卷22, 428~429쪽.

[17] 김옥균의 동정은 완전히 내무 당국에게 파악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문서의 외견에는 "秘"라고 붓으로 쓰여 있다(琴秉洞, 1991 □金玉均と日本-その滯日の軌跡□, 綠陰書房, 703~704쪽).

[18] 古筠金玉均正傳編纂委員會, 1984 □古筠金玉均正傳□, 앞의 책, 473쪽.

福澤를 비롯한 일본의 자유민권자들은 급격히 國權論者로 변화하여 갔고, 대청개전을 상정한 일본정부는 계속적으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급기야 1890년 제국의회에서 內閣總理 山縣有朋는 '主權線 利益線'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의 이익선 실현을 공언했다. 1894년 당시 일본사회는 대외팽창욕구로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김옥균에게 淸國行은 아무리 큰 위험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上海로 출발 전 김옥균이 宮崎滔天과 나눈 대화는 그가 上海행을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 人間萬事 運命이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李鴻章이 나를 꾀어 잡으려고 획책한 것이라 해도 환영한다. 나는 포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배에 탄다. 그곳에 가서 바로 죽게 되든 억류되든 상관없다. (단지) 5분이라도 談話의 시간이 있으면 나의 것이다. 어쨌든 문제는 1개월 (안에) 결정난다.[19]

1894년 3월 23일 김옥균은 上海로 출발하였다.[20] 이때 김옥균의 동행인은 수행원으로 和田, 통역으로 주일청국공사관원인 吳葆仁 그리고 자객 洪鍾宇의 3인이었다. 김옥균은 27일 오후 上海에 도착했는데,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경 숙소인 東和洋行의 객실 안에서 홍종우의 저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 사건은 上海 주재 大越成德 총영사대리로부터 김옥균의 거동을 감시하라는 내명을 받고 있던 동화양행 주인 吉島德三에[21] 의해 조계지 경찰당국인 工部局 警察部에 신고되었다.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곧 朝鮮·淸·日本의 3국 정부에 알려졌고, 관련국 모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김옥균 암살과 그 처리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일본정부였다. 일본정부는 암살사건 한달 남짓 전부터 香港 주재 일본영사 中川恒太郎의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암살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보고는 2월 10일 외무성에 접수되었다. 사안의 특성상 그리고 김옥균에 관한 조치들이 이전에 閣議에서 결정되던 관례로 볼 때 일본의 내각에 김옥균 암살음모가 보고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옥균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김옥균이 암살되기 하루 전인 3월 27일 陸奧는 전임 외무대신 靑木 駐英公使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陸奧는 "국민이 깜짝 놀랄 사건을 하지 않으면 人心을 진정시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條

---

[19] 河村一夫, 1987「李鴻章と金玉均との關係」□日本外交史の諸問題□, 南窓社, 14쪽 재인용.

[20] □時事新報□ 明治 27年 3月 27日.

[21] □日本外交文書□ 卷27-1, 487쪽.

約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22]

국회개설 이래 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은 1894년에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地租輕減 및 군사비 삭감 투쟁은 明治天皇의 「建艦詔勅」 한마디에 어이없이 붕괴하고 말았다. 이후 의회가 정부의 대외정책을 연약하다고 비난하고 국권확장을 주장한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와 대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가 충분히 발언을 하지 못하고, 정회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해산시키는 정부의 압제는 반정부적 기운을 의회로부터 국민에게로까지 확대시키게 되었다. 1894년 3월의 총선거에서도 여전히 민당 우세였다. 일본정부의 지도자들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전쟁에서 구하게 되었다.[23]

甲申政變 이래 대청개전을 목표로 일본은 軍備를 증강시켜 왔고 어느 정도 전쟁준비는 갖추어져 있었다. '이유 없는 전쟁'으로서 內外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전의 구실만 찾아내면 되었다. 위의 陸奥 외무대신의 書翰은 정부 당국자가 내심으로 품은 생각을 표명한 것이었는데,[24] 다음날 上海에서 '김옥균 암살소식'이 타전되었다.[25]

암살소식이 전해진 28일 일본정부는 즉시 조선 주재 大鳥 공사를 통해 '김옥균 암살'을 조선정부 및 袁世凱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정부는 袁世凱와 협의하여 김옥균의 死體 인도를 협의하였다. 29일의 검시 후 사체는 和田에게 인도되었고, 홍종우는 會審衙門에 기소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上海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和田에 의한 사체의 일본수송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사관의 방침은 본국의 훈령에 의해 곧 변경되었다. 같은 날 陸奥 외무대신은 "그 어떠한 日本人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영사는 절대 과도하게 보호하지 말 것"의 훈령을 大越에게 하달하였다.[26] 다음날인 31일에는 "김옥균의 死體가 일본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訓令을 하달하였다.[27] 따라서 김옥균 사체를 일본으로 이송하려던 和田의 노력은 일본영사관의 방해로 저지되었다.

김옥균의 사체와 홍종우는 청국 군함 威靖號에 탑재되어 조선으로 이송되어, 4월 14일 조선정부에 인도되었다. 이날 밤 楊花津에서 김옥균의 사체는 陵遲處斬되었고, 그의 목에는 "謀叛大逆不道罪人인 (金)玉均을 오늘 楊花津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능지처참한다"라는 木牌가 내걸렸다.[28]

김옥균 암살 이후 삼국의 대응과정을 보면, 조선과 청국은 처음부터 협력관계에 있었음을 분명

---

[22] 信夫淸三郎, 1974 □日本外交史□ 1, 毎日新聞社, 166쪽.
[23] 信夫淸三郎, 앞의 책, 150~166쪽.
[24] 藤原彰 저·嚴秀鉉 역, 앞의 책, 101쪽.
[25] □日本外交文書□ 卷27-1, 484쪽.
[26] □日本外交文書□ 卷27-1, 486쪽.
[27] □日本外交文書□ 卷27-1, 495쪽.
[28] □日本外交文書□ 卷27-1, 507~509쪽·506쪽.

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일본정부는 이미 김옥균에 대한 암살음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과 암살의 전과정에서 조선과 청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은 항상 일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암살의 정국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용한 것도 일본정부였다.

김옥균 암살의 소식은 3월 30일부터 신문을 통해 일본사회에 일제히 보도되었다.[29] 이후 일본의 신문들은 수개월간 대대적인 보도를 계속했는데, 이 암살사건이 일본국민에게 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김옥균 암살에 대한 哀悼의 논조가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여 4월 5일부터는 "金玉均 追悼義損金"모집을 위해 15개 신문사가 합동으로 紙上캠페인을 시작하였다.[30] 30일까지 전개된 이 캠페인은 일본사회에서 그때까지 유래가 없는 것으로 김옥균의 추도를 전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와중에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사체의 陵遲處斬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정부의 野蠻性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연일 계속되었다.[31] 그러면서 신문들의 논조는 애도에서 점차 조선과 청국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하였다.[32] 한편 사건 직후 頭山滿 등 김옥균의 故友를 자처하는 재야 대외강경파들은 '金氏友人會'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추모사업을 전개하였다. 여론은 점차 文明의 힘으로 野蠻을 응징해야 한다는 즉 對淸開戰의 요구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치는 외견상 철저한 방기였다. 당시 반조선·반청 여론 조성에 대표적인 신문은 福澤의 □時事新報□와 □東京日日新聞□이었다. □時事新報□는 이미 1885년 후쿠자와의 「脫亞論」을 계기로 대외침략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東京日日新聞□은 明治政府의 기관지였다.[33] 이것은 일본정부가 언론을 통해 김옥균 암살사건을 대청개전 여론의 조성에 이용했음을 말해준다.

5월 15일에는 衆議院에서 김옥균 암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판과 대청개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이 행해졌다. 31일에는 정부의 軟弱外交를 비판하며 「內閣彈劾上奏案」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김씨우인회의 주도로 貴族院·衆議院 의원들 및 전국 82개 신문사 대표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김옥균의 장례식'이 성대히 치루어졌다.[34] 또한 일본의 문화계에서는 김옥균의 암살을 주제로 한 演劇이 대흥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역시 김옥균 암살에

---

[29] □時事新報□·□東京日日新聞□·□國民新聞□ 明治 27年 3月 30日.

[30] □時事新報□ 明治 27年 4月 5日.

[31] □東京日日新聞□ 明治 27年 4月 18日 ; □時事新報□ 明治 27年 4月 18·24日 ; □國民新聞□ 明治 27年 4月 29日.

[32] □東京日日新聞□ 明治 27年 4月 17日·20日」; □時事新報□ 明治 27年 4月 24日.

[33] 松下芳男, 1960 □日本軍制と政治□, むろしお出版, 211~218쪽.

[34] □時事新報□ 明治 27年 5月 22日.

대한 조선 및 청국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응징을 담고 있었다.[35]

김옥균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날 的野半介는 玄洋社의 대표로 川上操六 참모차장을 찾아가 청국과의 개전을 주장하였다. 川上은 '伊藤 首相이 非戰論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전쟁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나, 곧 말을 바꾸어 '누군가 한 사람 불을 지르는 자가 없는가. 불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불을 끄는 것은 우리들의 任務'라고 대답했다.[36] 이처럼 일본정부는 대청개전여론의 조성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개전여론을 따라가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은 淸日戰爭에서 열강의 간섭을 염려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37] 이즈음 일본의 여론은 대청개전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실제 여론에서 강경론과 개전요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대청강경여론이 구체적인 대청개전요구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김옥균 암살사건이었다.

일본 국내의 통일된 강경여론를 바탕으로 일본은 신속히 전쟁준비에 착수하였다. 참모본부는 이미 5월 하순부터 조선파병을 위한 수송준비에 착수했고, 6월 5일 戰時大本營을 설치, 다음날인 6일 淸兵의 派兵소식을 접하자, 즉각 조선에 파병하였다. 7월 16일에는 새로운 「日英通商航海條約」이 조인됨으로써 일본정부가 가장 우려하던 청일개전에 대한 열강의 간섭도 배제되었다.[38] 이렇게 개전에 대한 國內外의 이해를 획득한 일본은 23일 한국의 景福宮 점령을 시작으로 淸日戰爭에 돌입하였다.

5. 맺음말

망명 이래 김옥균의 처우는 일본정부의 대조선 및 대청국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일본정부는 망명 직후 갑신정변의 책임회피를 위해 이들의 망명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후 '조러밀약', 巨文島事件으로 朝鮮이 列强의 각축장으로 대두되자, 갑신정변 후 조선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청견제력을 상실한 일본은 김옥균의 인도문제를 對淸共助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암살시도가 이어지고, 일본 내 반정부세력과 김옥균과의 연계가 우려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최대문제였던 不平等條約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김옥균을 국외추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내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던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小笠原島·北海道로 유배하였다.

---

[35] 琴秉洞, 앞의 책, 867~868쪽.

[36] 玄洋社社史編纂會, 1917 □玄洋社社史□, 435~437쪽 ; 黑龍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 上, 原書房, 143~144쪽.

[37] 陸奧宗光 지음·김승일 옮김, 1993 □건건록□, 범우사, 36쪽.

[38] □日本外交文書□ 卷27-1, 113쪽.

1890년 이후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김옥균의 자유이주가 허가되었으나, 감시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김옥균의 身邊上의 변화는 조선·청국·일본 3국의 외교분쟁이 될 수 있음으로 이를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김옥균 활용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청일전쟁을 위한 일본 국내의 여론통일과 대외적인 명분획득에 이용되었다.

같이 논의할 문제

1) 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의 정치적 지향은 무엇이었는가 ?
2) 1890년대 일본에서 대외강경론이 크게 확장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3)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 모두에서 3국 연대론 혹은 3국의 연대에 기초한 동양평화론이 등장했다. 3국의 평등한 연대에 기초한 동양평화 혹은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실현은 불가능한 꿈인가?